

포럼 <<

서울시 주민투표율 25.7%의 의미



류석춘

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
사회학

■ '무상급식'이라는 복지 쟁점에 대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좌절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. 애초에 법정 개함 요건인 투표율 33.3%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투표일이 임박했는데도 꺾이지 않자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, 시장직 사퇴 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. 오 시장은 오늘 약속한 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.

선별복지 선택으로 결집한 우파

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도 있지만, 복지 담론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연성(可燃性)을 애써 외면하는 부질없는 해석이다.

'보편복지 대(對) 선별복지'에 대한 논쟁은 냉전시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이념 논쟁의 초점이다. '사회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' 혹은 '스웨덴식 체제 대 미국식 체제' 또는 '큰 정부 대 작은 정부' 혹은 '좌파 대 우파' 사이의 논쟁이기도 하다. 나라마다, 또 시기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양자택일 또는 절충안을

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, 우리나라도 이 논쟁에서 예외 국가로 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.

복지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'지속 가능성'이다.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의 문제는 바로 비용의 문제와 직결된다. 좌파는 복지에 드는 비용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한다.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 복지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자는 입장이다. 그 반면에 우파는 비용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시한다. 비록 오늘은 자살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내일을 위해 복지 수혜의 대상을 선별하자는 입장이다.

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두 입장은 현실에서 항상 충돌한다. 두 주장 모두 지지층이 단단해 선뜻 결론이 얻어지지도 않는다. 이와 같이 양분된 여론에 결론을 얻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다름 아닌 24일의 서울시 주민투표였다. 그러나 투표율이 25.7%에 그쳐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선택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결론이 났다. 좌파의 승리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.

그러나 과연 그런가? 투표율 25.7%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. 이번 주민투표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출발했다. 그러나 투표가 진행되면서 선별복지를 지지하는 시민은 투표장에 가고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장

에 가지 않는, 다시 말해 공개투표 형식으로 투표의 양상이 변질됐다.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25.7%는 우파 성향의 유권자가 오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결집한 비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.

유권자의 25.7%가 우파로 결집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. 2010년과 2006년의 서울시 시장 선거 결과와 교차시키며 의미를 추출해 보자. 오세훈과 한명숙이 대결한 2010년 서울시 시장 선거의 투표율은 53.9%였다.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득표율은 오세훈 47.4%, 그리고 한명숙 46.8%였다. 이를 전체 유권자에 대한 득표율로 환산하면 오세훈 25.5%, 그리고 한명숙 25.2%라는 계산이 나온다. 이 숫자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결집한 우파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며, 접전에서 신승을 얻은 숫자이기도 하다.

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

2006년 오세훈과 강금실이 대결한 선거의 투표율은 49.8%였다. 득표율은 오세훈 61.1%, 그리고 강금실 27.3%. 그러므로 전체 유권자 가운데 오세훈 30.4%, 강금실 13.6%의 지지를 받았다. 이번 주민투표의 우파 결집률 25.7%는 2006년의 경우 낙승을 보장받는 수치였다. 따라서 오세훈은 복지의 선택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. 다만 투표율 33.3%라는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혔을 뿐이다.